

제 4 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 4.1 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문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4.2 조 상품의 반출

1.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 1 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 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
 - 나.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 라.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관세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¹

제 4.3 조

¹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국 관세당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지급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동화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 가. 가능한 한도에서 세관 이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나.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다. 국제무역 데이터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 라.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 4.4 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 또는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 4.5 조 협력

1. 이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정책의 중요한 수정이나 수입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국들은 다음에 관한 당사국들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는 데 협력한다.
 - 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특혜관세대우 신청절차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
 - 나. 이 협정에 따라 수입된 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 그리고
 - 다.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

제 4.6 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1. 당사국들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프로그램의 이행을 증진한다.
2. 그 요건을 준수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의무, 요건,

형식은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수립된다.

3. 당사국들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프로그램의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교섭을 증진한다.

제 4.7 조 비밀유지

1.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제 1 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 1 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4.8 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된 후 6 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바. 특송화물의 중량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 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150 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공식적인 반입서류는 각 당사국²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간소화된다.

제 4.9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당사국이 제 4.7 조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4.10 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국가 및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4.11 조 사전심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³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서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상품이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² 사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화물 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입제한 상품의 경우, 당사국은 공식적인 반입서류, 관세 또는 조세를 요구할 수 있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라.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120 일 또는 당사국이 자국의 법규에 정한 그보다 짧은 기간 이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사전심사서를 발급할 때,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서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3. 각 당사국은 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전심사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서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서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4.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발급 당사국은, 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자국 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 결과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할 수 있다.
6. 신청인이 사전심사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조치, 금전상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12 조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 지원

1. 당사국들의 관세당국은 특히 관세 법규 위반행위의 방지, 조사 및 대응을 통하여 그 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한 및 역량 내에서 상호 지원한다.
2. 지원 요청을 받은 당국은 그 권한 및 자원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 4.13 조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대표⁴로 구성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무역원활화 및 관세 사안을 다루는 일을 담당한다.

⁴ 한국의 경우, 대표는 한국의 관세당국이 될 것이다.

2. 위원회는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 보장
 -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변경에 기초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 다.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안된 해결 방안 권고
 - 1)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를 포함한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
 - 2)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그리고
 - 3) 당사국들 간 교역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장 또는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운영 관행을 한쪽 당사국이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 라. 국제 표준에 따라 당사국들 간 상업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 채택
 - 마. 당사국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를 포함한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수정에 대한 제안을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
 - 바. 전자 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작업
 - 사. 이 협정에 관한 통관 사안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⁵, 그리고
 - 아. 공동위원회가 부여하거나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수행
4. 위원회는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기능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5.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회합한다. 회합은 직접 대면 또는 당사국들이 이용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보고한다.

⁵ 당사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 사안은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제 4.14 조 기술적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장 및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공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의 협의 요청은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요청의 접수를 확인한다. 당사국들은 이메일이나 당사국들에게 편리한 매체로 그 사안을 협의할 수 있으며, 그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3. 그러한 협의회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 4.13 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회부할 수 있다.